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에게  
제주지역 사회복지인이 한목소리로 제안합니다

# 제주 사회복지 정책 8대 아젠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 I 출 범 배 경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대표자와 종사자들은 도민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계가 더욱 화합하고 결속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 현안에 대해서 직종과 분야를 불문하고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할 지역일꾼을 선출 하는데 있어 우리 스스로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이행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0년에 일부 사회복지시설·단체로 구성된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이 출범하여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를 대표하는 직능단체가 참여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한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II 운 영 원 칙

하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둘, 우리는 각 복지영역의 손익을 떠나 제주 사회복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셋, 우리는 깊이 있는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복지정책을 하나된 목소리로 제안한다.

넷, 우리는 제안된 복지정책이 도지사 후보자들의 복지공약으로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다섯, 우리는 공약으로 반영된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을 다한다.

### III 참여단체 및 공동대표단 명단

연번	구분	단체명	공동대표단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고 관 용	수석대표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황 영 호	
3	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협회	양 은 심	
4	노인복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이 재 문	
5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양 지 혜	
6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현 과 (우 영 철)	
7	장애인복지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김 우 찬	
8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문 성 은	
9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임 주 리	
10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박 경 속	
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현 명 현	
12	아동복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강 지 영	
13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안 명 희	
14	청소년복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 완 속	
15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제주지부	고 민 좌	
16	여성복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양 금 선	
17	노숙인복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이 경 근	
18	정신건강복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박 정 해	
19		제주특별자치도정신재활시설협회	박 정 해	
20	지역복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강 희 정	
21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	이 주 일	

○ 실무위원회 : 포럼 참여 직능단체 추천 실무자 21명(위원장 - 김남근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사무국장)

○ 간사 : 김성건 사무처장(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개발**

## 제주 사회복지 정책 8대 아젠다 개발 경과

1. (2025. 4. 15.) 2025년도 제1차 실무위원회
  - 「2025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로 ‘200인 원탁 회의’ 개최 의결
2. (2025. 9. 18.) ‘제주 사랑의 열매 지원’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 사회복지 과제 발굴 200인 원탁회의」 개최 -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
3. (2026. 1. 15.) 2026년도 제1차 실무위원회
  - 원탁회의 결과 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개발단 구성 의결
4. (2026. 2. 9.) 2026년도 제1차 공동대표단 회의
  - 정책개발단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
5. (2026. 3. 3.) 정책개발단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가. 단장 선출 - 고보선 교수(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 나. 정책개발 원칙 및 선정 기준 마련 - 사회복지 공통 핵심 아젠다 중심으로 개발
6. (2026. 3. 4~ 3. 20.) 정책개발단 - ‘200인 원탁회의’ 결과 분석
7. (2026. 3. 23.) 정책개발단 제1차 세미나 개최
  - 위원별 제안 정책(27건) 설명 및 토론
8. (2026. 4. 1.) 정책개발단 제2차 세미나 개최
  - 1차 제안 정책(27건) 및 추가 제안 정책(7건) 설명 및 토론
9. (2026. 4. 16.) 공동대표단 및 실무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 정책 아젠다(초안) 설명회 및 토론회 진행
10. (2026. 4. 21.) 정책개발단 제3차 세미나 개최
  - 정책 아젠다(초안) 설명회 및 토론회 결과 반영 여부 논의
11. (2026. 4. 28.) 제2차 공동대표단 회의에 최종(안) 보고 및 확정

## □ 정책개발단 위원 명단

- 아젠다 포럼 참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

(위원 - 총 14명, 간사 1명)

연번	분야 (추천직능)	성명	소속·직위	비고
1	노인(시설)	최만제	세화요양원장	
2	노인(재가)	이경자	성안노인복지센터장	
3	장애인(이용)	고경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4	장애인(주거)	임주리	장애인거주시설 벤엘 원장	
5	장애인(단체)	김태균	신장장애인주간활동센터장	
6	아동(이용)	한재민	종달지역아동센터장	
7	아동(생활)	김도영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8	여성·노숙인	고명희	모두의상담소 대표	
9	지역자활	안정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10	지역복지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11		김지선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	
12	사회복지사	강봉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장	
13	학계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단장
14	당연직	김남근	아젠다포럼 실무위원회 위원장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사무국장)	

(간사 - 김성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2026 제주 사회복지 정책 8대 아젠다

제주 사회복지 정책 8대 아젠다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개 단체가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을 바라며 드리는 제안입니다.

# 제주 사회복지 정책 8대 아젠다

## 1 사회복지예산 35% 확보

○ 전국 최저 수준인 사회복지예산을 임기 내 35%까지 확대

- 저출산·초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돌봄 수요 등에 대한 적극 대응 기반 마련

## 2 사회복지 민·관 협력 제도화

○ 「사회복지 민·관 협력 조례」 제정 및 조례 이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 주요 복지 정책,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가이드 라인 개정, 정년퇴직 예정자 교육지원, 종사자 채용 유연화 등), 복지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로 실질적인 민·관 협력 활성화

## 3 사회복지시설 안전·환경개선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안전진단, 증·개축을 위한 증·장기계획 수립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복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4 차별없는 종사자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 비정규직·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 돌봄 및 사회복지종사자 위험수당 지원

- 복지·돌봄 인력의 고용안정, 지속적인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 5 사회복지 현장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 현장의 디지털 기술 보급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 복지 효율성 극대화로 복지 재정 한계 극복, 노동강도 절감, 인력난 해소에 기여

## 6 누구나 누리는 돌봄과 노후 준비 기반 확충

- 이동보호·마음 건강·노후 준비 지원 및 마을 단위 돌봄지원센터 설치
  - 나이와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돌봄, 걱정 없는 노후 준비 지원

## 7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 수탁 시설 민간에 이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 서비스원의 역량 분산 지양,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

## 8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유치

-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사회복지 경쟁력 강화 도모
  - 전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힐링을 위한 핵심 거점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학술연구, 전문 연수, 힐링을 위한 전문 복합 공간 건립

## 1 사회복지예산 35% 확보

### 민선 9기 임기 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비율 35%까지 단계적 확대

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25%를 차지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이룸.

나. 그러나, 이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25년 기준 17개 광역시·도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32.8%로 대구(42.8%), 대전(42.7%), 부산(40.8%), 서울(39.6%), 광주(38.8%)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회복지 예산비중 (일반+특별회계)	전국 17개 시·도 평균(%)	29.9	29.8	30.9	32.8	32.8
	제주도(%)	23.6	23.0	22.9	24.2	24.5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

다. 사회복지예산 25% 달성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생계·의료급여 등 법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도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라.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돌봄 수요 급증에 따른 돌봄의 공공성 강화 요구 증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취약계층 증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부각, 지역 간 복지 격차 심화로 사회복지예산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마. 민선 9기 도정에서는 1)통합 돌봄 대상의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 아동까지 실질적 확대, 2)마을 단위 돌봄체계 강화로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3)민·관 협력 체계 강화, 4)복지·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회복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여 임기 내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3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2 사회복지 민·관 협력 제도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민·관 협력 조례」 제정
- 민·관 협력 ‘사무국 설치’ 로 복지 정책 및 현안 논의 상설화

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시민에 대한 복지의 1차적 책임과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나, 복지 분야처럼 광범위한 정책은 공적 역할로만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임.

나. 그러나, 민·관의 수평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은 요원한 상황임.

- 정책추진 시 민간의견 반영 미비,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 잦은 인사로 업무 및 현장 이해도 부족에 따른 불만이 민간 복지 현장에서 증가 추세임.

다. 이로 인해 민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가 극심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위한 의지 상실, 상호신뢰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하는 ‘복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이 필요함.

마.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민·관 협력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무국’ 설치가 필요함.

- (사무국 기능) 복지정책 및 현안 논의, 종사자 처우개선(인건비 가이드 라인 개정, 정년 퇴직 예정자 교육지원, 종사자 채용 유연화, 복리후생 등),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3 사회복지시설 안전·환경개선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안전진단, 기능보강 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예산확보

- 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인원이 이용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보건’은 시설 운영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나.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으나 ‘안전과 보건’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일부 시설관리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설이 있으나 하위 직급으로 채용되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 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으로 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의 모든 분야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이 법률에 따른 안전과 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 마. 특히,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인 경우 근거도 불분명한 보조금 지원 기준 제한에 묶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환경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기능보강 시행지침 마련, 시설규모 및 기능보강 필요도를 반영한 유연한 기능보강 사업비, 안전진단비, 중·개축 비용 지원이 필요함.

## 4 차별없는 종사자 처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 비정규직(계약직) 종사자에 대한 무기직 또는 정규직 전환 제도화
- 사회복지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시설’ 중심에서 ‘단체’ 까지 확대

가. 각종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계약직) 양산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고용 안정성 등이 모두 저해되고 있음.

나.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준수되고, 전문인력의 고용이 안정된 근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다. 또한, 통합돌봄 시행 등 지역 중심의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와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중심 복지사업 추진체계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사회복지 시설(각종 단체, 센터 등) 종사자인 경우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지급, 휴가제도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돌봄인력의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노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이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우선적으로 노인돌봄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이후 모든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위험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 5 사회복지 현장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 현장의 디지털 기술 보급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한  
(가칭) 「사회복지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운영
- 사회복지 현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I)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계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
- 나.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기술 운용과 현장 적용 등을 통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장기적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
- 다. 이를 위해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교육 및 기술보급, 유료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 기자재 확보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사회복지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함.
-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디지털 기술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문가로서 경력 등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라. 또한, 사회복지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복지 테크놀로지’ (Welfare Technology) 실현을 위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사회복지(돌봄) 인력 부족, 사회복지 재정 부족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6 누구나 누리는 돌봄과 노후 준비 기반 확충

- 나이와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돌봄 환경 조성
-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한 ‘노후 준비 연금’ 시행

- 가. (아동보호치료시설) 가정에서 정상적인 돌봄을 받는 아동 외에 학대 피해아동, 정서행동 장애아동,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위해 아동복지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설치가 필요함.
- 나. (마음건강센터) 제주지역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27.2%(전국평균 25.7%)로 전국 1위, 스트레스 인지율 44.9%(전국평균 41.3%)로 전국 1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전국 1위로 확인할 수 있을만큼 제주도민의 정신건강은 위험 수준에 이르렀음.
-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립·우울 문제 심화, 청소년 중독문제 증가 등 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권역별 또는 읍면동 단위 ‘마음건강센터’ 설치가 시급함.
- 다. (우리동네 돌봄·생활지원센터) 다양한 돌봄지원 체계가 작동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인 경우 이용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은 상태임.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 돌봄, 생활 지원, 예방적 건강관리 등 생활권에서 종합창구 역할을 하는 전달체계 필요
  - 마을 내 복지회관, 경로당 등 마을 공간을 활용하여 최소 이동 시간 30분 범위 내에 ‘우리동네 돌봄·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전담인력(퇴직인력, 자원봉사자 활용)을 배치하여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에 따른 종합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라. (노후준비연금)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대책이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제주도민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장년층(만 40세~만 60세)대상 ‘노후준비연금’ 시행, 은퇴(만 60세) 후 공적연금 수령(만 65세) 전까지 소득공백기 빈곤 예방
- 제도 시행 초기 대상자의 약 5% 범위(1만 명)내에서 시범 시행
  - 최대 120개월(10년)간 7만원 입금시 월 3만원 지원(일하는 동안 연금 저축, 일시지원금으로 360만 원 지원)

## 7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 공립 수탁 사회복지시설 민간에 이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 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음.
- 나. 당시 민간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사회복지재정 부담 가중, 기존 민간 사회복지계와의 역할 중복, 사회복지사업의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여건 조성을 촉구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설립이 추진된 바 있음.
- 다. 설립 이후, 사회서비스원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 전에 공립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 수탁을 확대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기능 수행과 수탁 시설 운영 모두에서 역할 집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2026. 4월 현재 - 사회복지시설 6개소, 사회복지사업 4개 수탁 운영 중)
- 이 과정에서 당초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명분이었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 라. 지난 2026. 3.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돌봄을 책임지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마. 이에,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사회복지시설 등을 민간에 이전하는 등 역량 분산을 지양하고, 전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통합돌봄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과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8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유치

- 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제주 설치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반영 추진함
- 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설치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협업하는 한편 건립비용 매칭, 운영 위탁

가. 전국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 인력은 2025년 12월 말 기준, 165만여 명이며 제주지역은 1만 6천여 명 수준임. 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제주 설치는 전국 사회복지사의 교육·연수를 통해 전문성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 사회복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임.

나.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단체와 기관종사자 등) 및 사회복지 행정공무원까지 연수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수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위케이션 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됨

다. 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력하여 국가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를 통한 제주 유치 필요함.

- 2019.06.14. 2019년 사회복지정책대회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유치 건의
- 2020.11.24. 원희룡도정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 면담을 통해 제주 유치 의사 표명
- 2022. 05. 사회복지사협회 오영훈 도지사 후보에게 정책제안
- 2024. 05. 문대림 국회의원 제주 유치 후보 공약사항

# 후보자 답변 서식

##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제안 정책 아젠다 답변서

(답변기한 : 2026. 5. 21. , 보내주실 곳 : jejubokji@hanmail.net)

소속 정당	후보자 성명	(서명/인)
-------	--------	--------

상기 본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서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에서 제안한 정책 아젠다의 공약 수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I 제안 아젠다별 수용 여부

연번	제주 사회복지 정책 8대 아젠다	답변 (해당 칸에 ○ 표시)		
		전부 수용	부분 수용	수용 불가
1	사회복지예산 35% 확보			
2	사회복지 민·관협력 제도화			
3	사회복지시설 안전·환경개선 지원체계 구축			
4	차별 없는 종사자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5	사회복지현장 디지털 지원체계 구축			
6	누구나 누리는 돌봄과 노후준비 기반 확충			
7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8	국립 사회복지사 연수원 유치			

### II 수용 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

연번	수용불가 및 부분 수용 사유

#### ※ 안내사항

1. 답변서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제주복지넷’ (www.jejubokji.net)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각 후보가 기한 내 제출한 답변서는 통합 정리하여 공개됩니다.

# 제주 사회복지 정책 8대 아젠다

